

“의대증원 연기’ 전제한 대화 불가... 교수 사직, 생명 걸린 일”

“의사증원 1년 늦추면 수급균형 늦어져 국민 고통 “의대증원 연기, 규모 축소’ 전제한 대화 수용 불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애로사항 2건...육설 등 방해도” 종합병원 입원환자 7% 증가·비대면진료도 15.7% ↑ 한 달 간 1·2차 병원 전원 구급차 이용료 정부 지원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4주째 접어들어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정부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진료와 교육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을 1년 뒤 논의하는 제안에는 “의대 증원 연기나 규모 축소 등을 전제한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 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애로사항 2건...육설도”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 등 19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전날 밤 화상 회의를 열고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5일까지 집단사

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2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서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에게 대화로 현 상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박 2차관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를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든지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의대 교수들이 실제 집단사직서를 내고 진료현장을 떠나는 경우 정부의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조치나 명령을 검토 중”이라며 “확정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뭐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인 신분으로 의료법 적용을 받으며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1만2909명 중 1만2001명(93%)이다. 박 2차관은 “어제는 전 날보다 이탈 전공의 수가 약간 줄었다”면서

“그걸 복귀로 볼 수도 있고 통계 안정성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속히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를 지키는 의사의 직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개통한 전공의 복귀 보호·신고센터에는 복귀 관련 애로사항이 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여 건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머지는 단순 질의 또는 육설 등 방해성 연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2차관은 “접수된 애로사항 2건은 기본적으로 비공개할 생각”이라며 “본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 집단 내에서 또 다른 분란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진료유지명령’이 일반 의사나 군의관 등 비대상자에게 잘못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2차관은 “전화번호 변경 등 기존 정보와 다른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 있었던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장·차관이 결과 책임 진다”...공보의 차출 양해 요청

정부는 전공의, 의대 교수 등과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내년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시기와 수칙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박 2차관은 “증원을 1년 연기를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 소독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은 27년간 정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 간 3만 명을 배출하게 된다”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의사들의 고령화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사태가 길어지면 복지부에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2차관은 “결과가 좋은 나쁜 등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저는 여러 차례 직원들 앞에서 장·차관이 모든 것을 책임 지니까 직원들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158명의 공보의·군의관이 이날 본격적으로 근무에 투입됨에 따라 지역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중증과 응급환자를 다루는 곳에 한 달 간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없는 병원 입원환자 7%·비대면 진료 15.7% 늘어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입원, 수술 등 전반적 의료 이용이 줄었으나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고 입원 환자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 평균 입원환자는 36.5% 감소했으나

12일 기준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5% 상승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0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이른바 ‘빅5’ 병원의 경우 지난주 대비 입원환자 수가 4.2% 늘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0.1%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1개월 간 삼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 전원이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이후 역설적으로 삼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환자 풀림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한 달 전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으며 12일 기준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1.9% 늘었다. 경증 비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전면 확대된 비대면진료도 2월 23~29일 3만569건이 이뤄져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병원급도 76건을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다.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기관과 환자 대상으로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2차 병원 의뢰가 있어야 삼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소아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하반기에는 권역별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선욱기자



당 번 의대 강의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공식 대화 응답 시간을 하루 앞두고 다시금 무더기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집단 허가가 이뤄지면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대학에 경고했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텅 빈 강의실 모습.

“글로벌 사기범죄 막자”... 韓 등 11개국, 차단·검거 공조키로

영국 런던에서 11일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개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11개국이 국경을 초월한 사기범죄 근절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해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행안부가 13일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주요 7개(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 위주로 올해 처음 개최했다.

국가 간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가했다.

특히 주최국인 영국은 G7과 5개국 군사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 이외에 한국과 싱가포르를 특별 초청했다.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들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11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해 세계시민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정상회의는 총 3개 세션으로 이뤄졌다.

먼저 제1세션: 사기범죄 위험 규모와 범접행기관의 역할’에서는 국제문제 부각된 사기범죄 위협에 대해 각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각국은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발생비중과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공유했다. 또 금융·통신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정교한 수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죄의 검거 및 대응에 국제협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위르겐 스텝 인터폴 사무총장은 “기술의 발달과 조직적 사기범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기범죄 수법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간 정보공유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사기범죄 현황도 ‘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 집행 간 공조를 토대로 인터폴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계 또는 국가 간 사기범죄 방지 책임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조직적 사기범죄를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 이용 범행수단 차단을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 :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에서는 세계시민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률체계, 자발적 협약, 교육·홍보, 정

지적 활동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3세션 : 정부·기업 협력’에서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필수적인 민관 협력력을 다뤘다.

참여국들은 금융·통신회사 등 민간부문과 원활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기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민관협력에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이날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응책 이행을 약속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자 검거와 국가 간 사기범죄수익 환수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NFIB)’, 캐나다의 ‘반사기센터(AFC)’, 싱가포르의 ‘반사기센터(ASC)’ 등 주요 국가별 사기범죄방지센터들과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첫 번째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왜 타일공사 방해해”...감독관에 둔기 휘두른 50대 입건

타일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사 감독관에 둔기를 휘두른 작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사 작업자 A(50대)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타일 공사를 하던 중 감독관인 B(3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독관이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은 곳을 밟고 돌아다녀 공사가 방해돼 화가 나 둔기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뉴스